

中國政治의 將來

安秉俊*

一. 正當性과 國家

1978年 鄧小平이 改革과 開放政策을 추진한지 20년이 지났다. 1989年 天安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권력을 장악한 江澤民이 이 정책을 계승해 온지도 10년이 지났다. 이 동안 中國社會와 國家는 실로 크게 變革해왔고 빛나는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을 이루어 왔다. 이 변혁 속에서 中國政治가 당면한 최대의 딜레마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共產黨統治國家의 正當性을 확보할 수 있는가 였다.

이 小考는 바로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中國政治의 장래를 한번 분석해보기 위하여 시도한 것이다.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주제는 中國은 현재 주로 경제발전과 민족주의에 의존해서 正當性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결과 '신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경쟁적인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되기까지는 적어도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상당한 정도의 민주화와 법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제 1978년 이전의 全體主義체제로 복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나마 民主化의 길을 갈 것이다.

중국정치 of 장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달려있다. 예컨대, 경제발전이 성공하느냐, 엘리트와 각 지역단위들이 단결을 유지하느냐, 臺灣이 독립하느냐, 美中관계가 대결을 피하고 협력하느냐 등의 변수가 중국의 장래를 좌우할 것이다.

1999년 7월 현재 中國은 경제발전의 둔화와 미중관계 악화로 인하여 약간의 정치불안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家는 주로 민족주의와 강제력에 의존하여 그 正當性을 유지하고 있다.

二. 天安門 사건이후 國家의 正當性

1989년 6월 4일에 일어났던 天安門 사건은 공산당과 국가권위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었다. 이때 집권한 江澤民은 민주화와 反부패를 외쳤던 대학생 및 근로자들을 탄압했으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은 계속해서 정당성을 누려왔다.

구체적으로 江澤民 黨總書記와 李鵬총리는 우선 人民解放軍을 동원하여 시위군중을 탄압했다.

* 延世大 教授

그러면서도 그들은 鄧이 주도했던 개혁 및 개방정책을 지속해왔고 무엇보다도 團結과 安定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원래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내용을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한다는 논리로 정당성을 구축했었다. 그러나 1989년 동구에서는 공산주의가 붕괴했고 중국에서는 反共 붕괴가 일어난 뒤 공산당은 경제발전, 민족주의 및 민주화에 의존해서 정당성을 향유해 왔다. 한편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思想'을 옹호하면서도 이른바 '中國特色的 社會主義'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자본주의를 원용해서 生産성과 국민생활수준향상에 모든 힘을 경주해 왔다.

1. 경제발전: 업적 정당성

鄧과 江은 계획경제를 시장기구로, 自力更生체제를 서방경제에 개방한 상호의존으로 전환하여 괄목할만한 기록을 이룩했다. 이제 中國은 이데올로기보다도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국민총생산과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업적정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78년 이후 중국경제는 연평균 9%가량 성장하여 세계에서 최고율을 자랑했다. 1989년 이후에도 이 추세는 계속되었으니 국민소득도 배증하였다. 이 발전상을 좀 단순화해서 시장화, 개방화 및 소비주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 市場化: 私有化

중국경제는 중앙계획에서 점차로 시장기구로 전환되었고 이 결과 국가통제를 벗어난 소유와 분배부분도 증가하여 私有化 경향을 축적해 왔다. 먼저 농업에서 시작되었던 責任生産制와 도급제가 공업 및 서비스 부문에도 확대되어 생산과 분배의 대부분이 시장기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는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시장경제를 合法化하여 적극장려하고 있다. 1999년 3월 第9期全人大 第2次會議에서 中國은 헌법을 수정해서 소유에 있어서 公有制과 동시에 私有制를 도입했고 '按勞分配'원칙을 지키면서도 기타 不勞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분배방법도 허용했다. 이 결과 1996년에 소유제의 현황을 보면 國有경제가 40.8%, 集體경제가 35.2%, 私有경제가 24%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社會主義的 市場經濟'로 비호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은 국유제가 축소되고 사유제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가속화하려면 국가기업들을 민영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천만 명의 실업자들을 양산하여 사회불안을 조성할 것이니 그것이 크나큰 문제이다.

2) 開放化: 세계자본주의로 편입

중국은 처음에는 동해안의 經濟特區에서 실험했던 개방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이 결과 중국경제는 세계자본주의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中國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다면 이 과정은 더욱 더 실감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수출을 증대했고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했으며, 서방회사들과 기술제휴를 적극 장려해 왔다. 사실 中國이 세계에서 최대량의 직접투자를 유치했다.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약 40%에 달한다

고 하니 이것은 중국경제가 얼마나 개방되고 있는가를 잘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아직도 元貨의 태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中國은 1997년에 닥친 아시아외환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中國은 현재 상당한 양의 외환보유고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면 더욱 더 국제 규범과 법칙을 따라서 대외경제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3) 소비주의: 돈맛

중국경제가 활성화하자 개인과 집단들은 서방에서 시작한 소비생활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그 수준은 서방의 것에 못 미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가전제품과 의류 및 서비스에서 소비주의를 향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그들이 '돈맛'을 알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그들은 돈벌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국가는 '先富政策'을 공공연하게 고무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돈만 쳐다보는 (向錢看)'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다수의 중국인들의 소비생활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2. 민족주의: 감정정당성

경제발전과 더불어 中國은 漢민족주의에 호소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사회불안이 일어날 때 중국지도층은 反美 또는 反日 감정을 고취시켜서 지지와 이해를 얻으려고 기도해왔다.

1999년 5월 11일 駐베오그라드 中國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오폭사건이 생긴 직후 중국당국이 군중동원을 한 분풀이에서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서 획득되는 지지를 우리는 '감정정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臺灣의 해방'

中國은 '臺灣의 해방'을 최후로 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中國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1995년에 臺灣의 李登輝가 자신의 모교인 코넬대학을 방문하는 것을 美國이 허용하자 中國은 臺灣해협에 싩탄을 적재한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美國이 항공모함전단 2基를 파견하자 中國은 그때야 군사행동을 중단했다.

2) 홍콩의 반환

1997년 7월 1일 홍콩을 반환한 것은 中國의 주권을 회복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鄧은 이것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꼭 성취하려 했으나 그해 2월에 他界하고 말았다. 그 대신 江이 이 민족숙원을 직접 관장하여 큰 위신을 누릴 수 있었다.

3) 美國과의 대등한 관계: 江-클린턴 정상회담

中國은 美國과 대등한 관계를 달성해서 국위를 선양하려고 안간힘을 다해왔다. 1997년 7월 江이 워싱턴에 갔고, 1998년 10월 클린턴이 北京에 와서 정상회담을 갖고 天安門에서 공개적 행사를 한 것은 江에게 지대한 위신을 더해주었다.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WTO 가입을 방해해왔다고 믿는 일부 군부세력에게는 WTO 가입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격상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民主化: 절차정당성

文化革命이후 中國은 민주화를 허용했다가 곧 그것을 탄압하였고 天安문사건 이후 주로 행정개혁과 향촌선거등만 허용하는 '政治改革'을 실시하여 불만을 해소해왔다. 비교적 시각에서 中國은 민주화는 경제발전과 강대국 실현이후에나 실현가능하며 현재에는 단결과 안정을 다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와 반대정당 및 法治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절차정당성'을 中國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단결과 안정 강조

江은 1989년 이후 줄곧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단결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이것은 그가 軍部の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는 黨군사위위원회의 주석으로서 그를 지지하는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고 臺灣과 美國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려고 노력해왔다. 따라서 민주화는 어디까지나 정부, 黨, 軍의 단결과 안정을 해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 밑으로부터 서서히 실현하자는 데 江과 군부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

2) 鄉村선거

江은 1988년부터 鄉村수준에서는 직접비밀선거를 허용했다. 인민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에는 경쟁적 선거전과 비밀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省과 중앙수준에서도 약간의 반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中國은 풀뿌리 수준에서 민주화를 조심성 있게 실현하고 있다. 각 기능 및 행정단위에서도 제한된 선거전과 여론조사도 실시되고 있다.

3) 제한된 法治主義

원칙적으로 中國은 헌법에 기초하여 法治主義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黨과 정부가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예컨대 1999년 6월 26일 奎人大는 홍콩의 최고재판소가 판결한 결정을 무효라고 선언했다. 즉 본토에서 태어났지만 단 한 명의 부모를 홍콩에 가진 자는 홍콩에 가서 거주할 수 있다는 홍콩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한 것이다. 이는 홍콩에서의 법치를 무시한 행동이다.

다만 경제거래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中國이 국제규범을 따라서 法制化를 서두르고 있다. 1999

년 3월 全人大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헌법개정을 한 것이다. 국제변호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 등이 이를 과시해 준다. 그러나 中國은 대체로 法治보다 人治를 더욱 중시하는 정치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三. 中國政治體制的 세 가지 시나리오

위에서 약속한 정당성의 근원을 감안할 때 중국정치체제의 장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신권위주의'가 계속되는 것, 둘째는 이 체제가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 셋째는 옛날의 전체주의로 후퇴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신권위주의'가 약 30년간 계속되다가 21세기 중엽에 가서야 민주주의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고 전체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1. 신권위주의: 일당독재와 사회적 다원주의

중국공산당은 권력을 장악해서 독재를 하지만 사회, 경제 및 문화에서는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신권위주의'를 지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에는 권위주의, 경제에는 자본주의, 사회문화에는 다원주의가 병존하는 혼합체제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상태가 전개될 것이다.

1) 발전국가: '부드러운 권위주의'

공산당이 군을 통제하고 정부를 감독하는 한 중국에는 이른바 '발전국가' 또는 '개발독재'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권위주의' 체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즉 우선 먹고사는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발전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단결과 안정을 꼭 실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독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독재는 종전처럼 사상개조와 군중동원 등을 통한 탄압과 학살은 지양하며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드러운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이라는 것이다. 즉 공산당의 정권 독점만 도전하지 않는다면 개인과 집단의 사생활에서의 자유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970년대에 한국에서 존재했던 '유신체제'나 臺灣의 國民黨독재와 비슷한 양상이다.

2) 경제적 자본주의

경제에는 실제로 자본주의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물론 中國은 이것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노동과 소유까지 상품화하기 시작한 이상 중국경제는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세계경제에 중국이 통합되면 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3) 사회적 다원주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국인들은 다원주의를 심화하고 있다. 서방의 소비생활과 유행은 통신이나 인터넷, 그리고 각종 교류를 통해서 중국 내부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의식주는 매우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대중화하고 있다.

2. 民主主義

중국의 국민동의에 근거한 정부를 구성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앞으로 한 세대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헌법에는 정당구성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당국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공산당은 중국이 분해하거나 혼란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복수정당, 중산층 형성,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1) 복수정당제도

中國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군소정당이외에는 참된 복수정당제도를 아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1998년 10월부터 일부 반체제인사들이 民主黨을 결성하여 등록을 피했으나 당국은 이를 불허하고 그들을 탄압하였다. 특히 군중봉기를 자극할 수 있는 정당이나 민의발현기도는 신속하게 억제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중국 내에서 약 1억의 추종자들을 갖고 있는 '法輪功'이라는 종교의 신도들의 자발적 모임을 중국당국은 탄압하고 있다. 뉴욕에서의 이 종교의 창시자 李洪志의 활동에 대해서도 北京당국은 매우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政協에 속하고 있는 군소 정당들 이외에 공산당이 언제 일당독재를 반대하는 정당들을 허용하고 전반적인 비밀보통투표를 실현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2) 중산층 형성

중국의 도시에서도 중산층은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결집하여 뺨만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위하여 집단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중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할 것이다. 현재 농촌과 도시에서 간헐적으로 이탈행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민주화투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도시에서 대학생, 근로자, 직업인, 관료 및 정치인들이 인권보호 및 정당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때 '국민의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더 큰 규모로 확대되고 조직화되어 하나의 시민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이미 일부 중산층은 외국의 인사들과 연계를 하기 시작했으나 그들의 세력은 미약하다.

3) 法治主義

중국에서도 적법절차와 규범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고 재판을 하며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제도화될 수 있다. 이러한 '自由化'가 '民主化'와 보완되면서 발전되어야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발전해야 한다.

3. 전체주의

중국이 전체주의로 퇴보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후퇴, 지역주의, 미중대결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 급격한 경기후퇴

중국경제가 급격하게 후퇴하여 심각한 불평등과 사회불안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에 달한다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여 비상체제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전체주의와 비슷하게 강제력을 사용하여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데 치중할 것이다. 현재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약 1억에 달하는 실업자들,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란, 고위층에 존재하는 부패 등은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2) 지방주의에 의한 중국의 와해

지방주의가 성행하여 중앙집권적인 中國이 와해할 때 공산당과 군은 전체주의를 부활시킬 것이다. 1920년대에 일어났던 軍閥이 재연된다면 군은 단결과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모든 강압조치를 불사할 것이다.

3) 臺灣의 독립과 美中對決

臺灣이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이 이것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면 中國은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 결과 美中대결은 신 냉전을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전사사태에 직면한다면 중국은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나타낼 것이며 美國과 패권다툼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

四. 결론: 江澤民下의 中國政治

1999년 7월 현재 中國의 정치는 江澤民下에 집단지도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毛와 鄧과는 달리 江은 天命을 받은 天子나 皇帝는 아니고 李鵬, 喬石, 朱鎔基, 胡錦濤 등과 함께 합의를 이루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이들은 政治에서는 일당독재를 고수하면서도 경제사회는 다원주의를 허용하여서 주로 가시적인 업적과 민족주의 감정에 의존하여 정당성을 향유한다. 따라서 그들은 민주화에서 오는 절차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신 권위주의는 중산층의 민주화 요구를 현재 가능한한 억제하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고 외국의 민주세력들과의 연계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지도층은 경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기술자와 근로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사회불안도 늘어나며 반정부세력도 표면화하고 있는 것은 다소 불안한 징조들이다.

과거 10년간 권력을 강화해온 江이 이러한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와 중국 정치의 장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신 권위주의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변경되더라도 앞으로 수십 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